대정부 이슈·범종단 종교편향 저지

2021년 종단 결산

각 종단의 크고 작은 변화 속
안정적 운영으로 내실을 기해
정청래 의원 · 캐럴캠페인 등
불교계 공분 결집하는 계기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한 스님들.

올해 불교계는 각종단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대정부 이슈가 이어진 해다. 코로나19 사태로 각 종단들이 정부지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한편, 잇단 종교편향 논란으로 범불교적 차원에서 불교왜곡 · 종교편향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조계종과 태고종 간 선암사 소유권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고 각 종단들의 크고작은 변화 속 오랜 혼란에 몸살을 앓던 법화종은 마침내 정상화 토대를 구축해 눈길을 끈다.

종부세 논란 등 대정부 이슈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이 변경되면서 전통사찰에 부과되는 세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오랜세월 동안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사찰이 다수의 주택 부지나 농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왔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실질적인 과세가 부과됐고 법인에 대한 제세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돼 "사찰땅 팔아 세금을 내야 할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적지 않았다.

이에 조계종은 "개정된 종부세 부과기준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민족 공공의 문화자원이자 유산인 전통사찰의 유지 및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조계종은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이의신고 기간 내 관할 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소 및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교왜곡 · 종교편향 적극 저지

반복돼 온 불교왜곡 · 종교편향에 불자들의 공분이 폭발하면서 범불교 차원의 저지활동이 잇따라 확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왜곡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정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이를 징수하는 사찰은 '봉이 김선달'로 폄훼해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그동안 반복돼 온 종교편향 이슈도 잇따라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주어사와 천진암 등 사찰터가 가톨릭 순교지로 성지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넘은 성지화' '역사 덮어쓰기' 논란이 크게 일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독교음악인 캐럴을 활성화하는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산발적으로 일었던 종교편향 · 불교폄훼 저지 움직임이 범종단 차원으로 확산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종교편향범종단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계종은 종교편향 ·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를, 중앙종회까지 종교편향 · 불교왜곡 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파장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각 종단 안정적 운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 사찰과 각 종단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올해 각 종단들은 안정으로 내실을 다지는 모습이다.

조계종은 위축된 해외사찰 활성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 국내 사무처를 설립했으며, 10주년을 맞은 승려복지 안착을 위한 성과 분석과 미비점 개선으로 확고한 토대를 다졌다. 태고종은 내홍의 상처를 완전히 딛고 성장을 위한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그 일환으로 100년 역사에도 사실상 명맥이 단절됐던 〈월간 불교〉를 복간하고 법제개정과 체제정비 등에 매진했다.

지난해 극심한 내홍으로 혼란했던 법화종은 올해 새로운 종정 도선 스님이 추대된 이후 총무원장 서리 체제로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총지종도 내년 창종 50년을 앞두고 새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선출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거세지는 종교편향 대응 범불교도대회 추진도

대책위, 12월 16일 대응안 논의

수없이 반복돼 온 종교편향 및 불교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계 행보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 · 불교왜곡범대책위원회가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강경책으로 내년 1월 승려대회, 2월 범불교대회 개최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중앙종회도 종교편향 · 불교왜곡 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 이하 범대책위)는 12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반복되고 있는 종교편향과 불교왜곡 발언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범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범대책위에서 요구한 대로 정청래 의원을 제명 · 출당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교구본사와 지역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항의 시위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항의 시위는 전국비구니회를 비롯해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대불청, 대불련 등 불교단체들도 함께하기로 했다.

범대책위는 또 문체부의 캐럴 보급 캠페인에 대한 종교편향 문제를 불자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관련된 유인물을 제작, 전국 사찰에 배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의원의 불교왜곡 발언을 규탄하는 현수막 게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선관위 측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는 현수막에 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온 만큼, 법률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범대책위는 또 내년 1월 중순까지 불교왜곡과 종교편향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1월 중하순 승려대회에 이어 2월 중순 범불교대회를 여는 등 조직적인 행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일정은 내년 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예정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게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장 원행 스님은 최근 불거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과 문화체육관광부 캐럴 캠페인, 문재인 정부 이래 벌어진 종교편향 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우리가 불교의 자주권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해 이 난국을 타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도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문)는 12월 16일 제223차 임시회를 열고 첫 안건으로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특위는 선광 스님을 위원장으로, 종책모임별 2인과 비구니 스님 2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종교편향 및 불교 폄훼 · 왜곡 사례 수집부터 대응전략 마련, 종교편향 방지와 불교왜곡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선광 스님은 이날 '가톨릭만 받드는 문재인 정부' 제하의 문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초기부터 마무리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사례들을 공유했다.

선광 스님은 "대통령은 개인신앙인

승려대회 · 범불교도대회 추진
중앙종회 '대응특위' 구성 결의
민주당사 항의방문해 입장전달

가톨릭만 받드는 정책으로 시종일관했고 이 과정에서 불교를 비롯해 이웃종교를 무시하거나 홀대했으며 특히 전통문화보존 정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특위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데 이어, 첫 행보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항의방문하고 "정청래 의원 출당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이는 문화재관람료 왜곡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행보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60여 중앙종회 의원이 참석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수칙에 의해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부의장 각림 스님, 만당 스님과 특보단장 혜일 스님, 종교편향 종회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이 대표로 당사로 들어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통문화발전특위 위원장)과 서영교 의원 등에 불교계 요구를 전달했다.

송지희 · 임은호 기자

총지종 새 통리원장 우인 정사 선출



불교총지종 제20대 통리원장에 현 종회의장인 우인 정사<사진>가 선출됐다.

불교총지종은 12월 15일 오후 2시 통리원서 제159차 종의회를 열고 새 통리원장에 우인 정사를 선출했다. 우인 정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선종후사의 정신으로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승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우인 정사는 2003년 전법관정수계를 수지하며 불교총지종 스승의 길에 올랐다. 2019년도 제 12대 종의회의장에 이어 현 13대 종의회의장을 연임하는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아왔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산림청, 산림생태계 복원 협력

12월 14일 업무협약 체결
숲 복원캠페인 공동 추진



조계종이 산림청과 함께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남북산림 협력과 사찰림 보존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산림생태계복원과 유지,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전통사찰과 사칠림이 자연공전 정신과 문화재를 품고 있는 소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공간임을 함께 인식하고 보존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이를 위해 조계종과 산림청은 전통사찰의 산림보전과 관리, 남북 산림협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캠페인을 공동추진키로 하고 평화의 나무 심기 및 숲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연구와 사찰림 DB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존방안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찰림과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의 공동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과 문화재 주변 산림과 산림유전자원의 보호,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활동,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의 산림보전 및 활용 증진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사찰림은 국가나 산림청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보존 유지돼 왔으니, 앞으로 각 사찰이 자율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사찰림을 보존하고 가꿔나갈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이번 협약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 사찰림 복원을 위한 지원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사찰림은 오랜 시간 동안 사찰과 함께 지속된 문화유산으로,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숲"이라며 "조계종과 협력해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